

자료 : 도서관정책 질의 및 답변 관련

※ 아래 자료는 '97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서관운동연구회(대표 이혜연)가 하이텔 등 통신업체들이 추진했던 「'97 대선후보 초청 사이버 대토론회(PCVOTE)」를 통해 차기 대통령 입후보자가 있는 각 정당에 보낸 도서관관련 정책 질문들과 그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만을 모은 것임.

■ 도서관운동연구회의 도서관정책련 질의 내용

수신 : 각 정당 대선후보

제목 : 도서관정책에 관한 질의

1. 귀 후보의 건승을 바랍니다.
2. 도서관운동연구회는 삶의 질을 생각하며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실천으로 도서관운동의 대안을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현장 사서들의 단체입니다.
3. 21세기를 바라보는 지금의 세계적인 화두는 물질경제의 발전보다는 한 개인만이 아닌 인류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일 것인가입니다. 지금까지의 사회가 경제적 능력의 유무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였다면, 이제는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전체 국민에게 사회적,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 및 문화공간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요즘 사회, 경제적 불안 속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우리나라는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문화, 복지 부문은 도외시한 채 경제, 정치 부문의 성장만을 주목적으로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에는 국민의 여가와 문화, 교육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공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한 국민은 여가, 문화, 교육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서관에 대한 발전적 대안이 부재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도서관은 특히나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학생들의 공부방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문화적인 재부를 경제적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재분배하는 문화적 공간입니다. 또한, 문화적 공간의 부족으로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상업문화, 퇴폐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하고, 평생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게 할 수 있는 교육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공공도서관은 사회의 발전과정에서도 별로 변화하지 못한 채 예산, 자료, 직원의 부족으로 도서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도서관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2만 도서관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운용의 정책적 대안을 설정하는 각종 선거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공약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례로 '9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만이 도서관에 대한 간단한 언급만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도서관과 문화복지 부문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저희 도서관운동연구회는 각 대선 후보님께 다음과 같은 정책질의를 합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님들의 답변을 도서관운동연구회의 기관지인 [도서관운동] 각 후보별 대선정책 비교분석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도서관정책질의서

1. 행정조직

- 1.1 지금 현재 도서관정책은 문체부와 교육부로 나뉘어져 있어 행정체계의 미비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책은 무엇입니까.
- 1.2 국가적인 차원의 도서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도서관정책 자문기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재 도서관정책 자문기구의 문제점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1.3 지역민의 교육·문화·복지·여가·정보의 장인 도서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여타의 상황으로 인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서관정책이 실현되기 보다는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정책의 실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원방안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

- 2.1 국민의 문화·교육·정보·여가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도서관의 확충과 양질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의 조성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의 규모와 그 실행에 있어서 미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진흥기금의 의무를 지닌 문체부가 기금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 감사원의 폐지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진흥기금의 적절한 조성과 실행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3. 시설과 자료

- 3.1 도서관은 지역민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양질의 자료를 소장해야 하는 기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96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장서수는 0.33권으로 미약한 실정입니다. 도서관자료가 양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서관은 다양한 매체,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소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기준과 지원 육성책이 미비한데, 도서관 자료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3.2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생활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그에 상응하는 정책 개발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너무 급조해서 충분한 조사와 전망제시 없이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서관도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 각 자치단체가 제시하고 있는 다기능 복합 건물과 도서관의 민간위탁은 도서관문제와 공공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 기능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운 대안입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을 무엇입니까.

4. 봉사대상인구

- 4.1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실제적 공간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권역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실정은 공공도서관의 지리적 접근점을 말하기 이전에 수적으로도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1관당 인구수를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63,157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 2배인 137,189명에 달합니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봉사를 위해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직원

- 5.1 도서관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배치와 그에 합당하고, 정당한 대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도서관의 사서직 공채의 경우는 대부분 9급직으로 실시되고 있어, 타 직종과의 형평성과 비교해 볼 때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급수가 4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문인력 활용에 크게 위배됩니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훌륭한 자질과 열정을 갖고 있는 예비사서들이 공공도서관을 기피하고 있어 공공도서관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 5.2 현재 도서관에서는 사서직의 절대부족을 호소합니다. 직원의 부족으로 인해 양서의 선정, 지역민의 요구를 분석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전문영역의 업무는 엄두도 못내고 단순한 책지킴이로서만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한 자질을 지닌 전문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은 정부의 구현이라는 대의명분은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체제에 대한 개혁과 보완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할 때, 사서직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직원에 대한 인력정책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5.3 '97년 1월 1일부터 사서직 관장제를 실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행정직과의 갈등으로 인해 법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서직 관장제의 실시를 위해 어떠한 방안과 정책집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서관운동연구회의 도서관정책에 관한 질의에 대한 각 당의 답변

◆ 국민신당(1997년 11월 14일)

[도서관운동연구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

1. 행정조직

1.1 도서관은 정서함양과 정보전달의 매개체라는 양면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교육뿐 아니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적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문헌정보의 양과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이 됨에 따라 도서관은 날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맡아야 할 역할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같은 도서관의 기능적 복합성으로 인해, 관할 행정부처가 이원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밖에 도서관의 기능 확대와 통신정보시스템의 발달에 따른 결과로, 정보통신부 역시 도서관과 관련한 행정부처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의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은 정보통신부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서관의 정책이 문화체육부와 교육부 내지는 정보통신부로 나뉘어진 것을 행정체계의 미비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사회구조와 국민의식을 감안할 때 각급 학교의 도서관은 교육부의 관할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전산망 및 인터넷과 연계된 도서검색시스템의 개발과 운용은 아무래도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여러개 행정부서로 나뉘어진 것에 있다기보다는 유관부서의 상호협조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유관 부서의 상호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인이 집권하면 관련 부처내의 기구를 통폐합하되 각 부처 안에 부처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전

담할 부서를 신설하도록 할 것이다.

1.2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풍토의 진작을 위해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는 현재 연1회의 의례적인 모임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동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선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과 동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문화체육부장관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위원은 재정경제원·내무부·교육부·문화체육부·보건복지부·체신부·총무처·과학기술처 등의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도서관협의회 장 및 문고협회의 장, 관련분야의 교수와 유관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운데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장 도서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행정부처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부가 이에 빠지고, 그 대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보건복지부나 체신부, 내무부, 재정원, 총무처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동 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 문화체육부 안에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교육부와 정보통신부에도 별도로 전문부서를 두어 문화체육부와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동 위원회의 수와 도서관협회장, 출판협회장 등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인 정책 심의와 자문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것이다.

제도적인 뒷받침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도서관에 대한 국민들의 발상의 대전환이다. 다시 말해, 일반 도서나 각종 매체를 통한 문헌정보의 신속한 습득과 전달이 국가 전체의 문화적 역량 및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인이 집권하면 유관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공청회와 국제도서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도록 하겠다. 이같은 제도의 개선과 인식의 전환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도서관 정책 자문기구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1.3 중앙정부가 가장 시급히 실현해야 할 도서관정책은 산하 자치단체 상호간의 업무체계 통일과 역할의 조정이라고 생각한다. 부수되는 재정상의 지원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선 각급 학교 도서관을 비롯하여 각종 도서관의 도서 및 문헌관련 처리를 단일한 체계로 일원화시키고, 관련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같은 기초작업이 이루어져야 장기적인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국가전산망과 연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을 정점으로 하는 도서정보검색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어느 곳에서나 자료의 검색과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는 자문단체의 도움을 받아, 산하 각 지방단체의 도서관이 다양하게 특화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민속박물관·농업박물관·해양박물관 등처럼 도서관 역시 각 지방정부의 역사적 전통과 현실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하나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특화시킬 수 있도록 조정하고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예산

2.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르면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의 노력 부족과 제도상의 미비 등으로 인해 기금 조성의 실적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극장 등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원천징수하고, 각종 체육관련시설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징수하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도서관 및 독서생활이 국민의 정서함양과 문화발전, 국가경쟁력의 제고 등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다소 의외적인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집권하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역시 체육진흥기금 등과 유사한 형태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3. 시설과 자료

3.1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질적인 면은 차치하고 장서의 절대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9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장서수가 0.33권으로 일본(1.5권 : 1990년 기준)이나 미국(2.7권 : 1990년 기준) 등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이다. 도서는 물론이고,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 그 제작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시청각자료와 CD 롬 타이틀, 각종 기록문서 등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의 우선 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국방비 등의 경상경비가 많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선불리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도서관 관련 예산을 증액하되, 우선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의 운용을 개선해서 그 기금으로 열악한 도서관의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것이다.

3.2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상 단시일안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만족스러운 도서관 시설을 완비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기 위해서는 원하는 책을 손쉽게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주민들의 생활공간 속에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마을문고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서 마을문고가 지역공동체의 문화와 복지 생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다소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적인 문화센터의 설립을 통해 독서를 생활화하는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해 보는 것도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4. 봉사대상인구

4.1 문화체육부가 조사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997년 현재 각시·도에 설치된 도서관은 법정기준치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다. 동일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 1관 대비 인구수만 하더라도 독일(4,293명 : 1990년 기준), 영국(10,861명 : 1989년 기준), 프랑스(20,496명 : 1987년 기준), 미국(16,394명 : 1990년 기준)은 물론이고 다소 열악한 일본(63,157명 : 1990년 기준)에 비해서도 두배 이상이다.

이같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서 말한 마을문고의 운영이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마을문고의 소장도서 및 자료부족은 정보검색시스템의 운용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되, 마을문고는 교양 및 일반도서, 시·군·구의 도서관은 일반도서 및 전문서적, 광역시 및 도의 도서관은 각종 전문서적·특화도서·고서·지역관련 문서 등을 소장하는 식으로 차별화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군·구의 경우에는 임기내에 전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인구수에 따른 적정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단,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세계상의 혜택을 주어 민간취탁의 형식으로 사립도서관을 운용하도록 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헌납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직원

5.1 도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다. 특히 각 광역시·도의 공공도서관과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영역별로 전문적 수련을 거친 사서가 배치되어 이용자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시대적 추세에 따른 도서관의 변신과 전문인력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총무처 및 재정원과의 협의를 거쳐 우선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사서의 직급을 조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 다만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의 직급 조정 문제는 공무원의 전체적 수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타 직종과의 형평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

5.2 통계에 따르면, 사서직원의 배치달성율이 법령이 정한 바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물론이고, 시·도 교육청 소속 도서관 역시 사서직원의 배치율이 대부분 2,3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서직원의 확보가 사서직의 직급 조정 이상으로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수를 줄이고 부서를 통폐합하여 정부의 군살을 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런 때문으로 특정 부서의 공무원수만을 증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만, 사무의 자동화와 행정의 간소화, 부서의 통폐합을 통해 공무원의 절대수를 늘이지 않더라도 절대수가 부족한 사서직의 임용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본인이 집권하면, 임기내에 최소한 50%이상으로 사서직원의 배치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5.3 '97년 1월 1일부터 사서직 관장제를 실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7년 현재 각 시·도 도서관의 사서직 관장 임용비율이 겨우 11.4%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서직 관장이 전혀 임용되고 있지 않는 인천·강원·충북·전북·경남·경북 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신속히 사서직 관장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서직 관장으로의 대체는 사서의 직급 조정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각 시·도 소속의 전체 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으로 사려된다. 다만, 국가에서 정책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한다면 빠른 기한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새정치국민회의(1997년 11월 9일)

[도서관운동연구회 귀중]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 쌀쌀한 환절기에 댁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새정치 국민회의에 많은 관심과 성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회에서 보내주신 도서관정책 질의는 우리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하시는 일에 행운과 발전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새정치국민회의 (1997년 12월 13일 11월 9일자 답변에 대한 수정 답변)

1. 행정조직

1.1 도서관은 학문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보제공, 문화발전, 나아가 평생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서관에 관한 행정을 교육부와 문화체육부로 나누어 분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문화체육부는 나름의 역할에 맞도록 도서관 정책을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도서관을 전문적인 학문연구에 기여하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특히 대학도서관의 전문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 문화체육부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활용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서관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행정체계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부의 일관된 도서관정책과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며 도서관이 차지하는 역할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미래지향

적인 정책수립과 중단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 도서관정책의 자문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역시 현정부의 다른 일반적인 정책자문기구와 같이 年1회의 연례적인 회의 개최외에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그 설립취지인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한 정책 자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정부 역시 진흥위원회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의지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특히 정책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역시 진흥위원회의 의견을 정책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1.3지방화시대의 가장 큰 문화정책의 방향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지방에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방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도서관정책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있는 지역 역시 종합적 문화서비스의 차원에서 도서관 활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당은 지방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생활권과 결합한 시 군 구 단위의 다목적 복합문화센터의 건립과 읍 면 동 단위의 소규모 복합문화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 군 구 단위로 정보도서관을 설립하여 종합적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예산

2.1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의 폐지권고에 이르기까지 문화체육부가 보여준 활동 내용은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한 단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목표는 있되 실천하지 않는 전시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이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진흥을 위해서 우선 이름 뿐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금이 실질적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시설과 자료

3.1 현재 도서관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우수한 장서의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쇄매체의 장서확보 뿐만 아니라 영상을 포함한 정보매체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영상도서를 포함한 장서의 교체기간이 과거에 비해 훨씬 단축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도서관 실정으로는 장서구입비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당은 공공도서관의 장서구입비를 대폭 늘리고, 학술서적과 우수도서를 전국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서추천제도를 확대하여,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서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2 우리 당의 시 군 구 단위의 다목적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문화시설의 이용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고, 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합건물과 도서관의 민간위탁은 우리 당의 계획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의 민간위탁운영은 공공도서관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4. 봉사대상인구

4.1 우리 당은 공공도서관을 포함하여 복합문화센터를 시 군 구 단위로 1개씩 설립하고, 아울러 읍 면 동 단위의 소규모 복합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맞 맞추어 시 군 구 단위별로 정보도서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도서관의 확충 역시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5. 직원

5.1 우리 문화행정의 문제점중의 하나가 전문인력의 확보와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도서관정책 역시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문화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에서 문화부를 독립시켜 확대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관주도의 문화행정에서 전문인 중심의 문화행정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도서관정책 역시 전문사서직의 직급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 도서관의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인력에 의한 문화행정만이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5.2 작은 정부의 구현은 전문인력에 의한 효율행정을 강화할 때 가능합니다. 도서관의 인력정책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책을 지키고 빌려주는 업무가 아니라 문화도서관, 정보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에서도 새로운 정보화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화 전문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3 도서관의 사서직 관장제의 실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입니다.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의지 부족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하는 것은 전문적인 문화행정체계를 이루는 상징적 의미와 실질적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문화행정의 전문화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집권을 하면 즉각 사서직 관장제를 시행하겠습니다.

◆ 신한국당 (1997년 11월 11일)

[도서관운동연구회 귀중]

1. 항상 우리당을 아껴주시고 협력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당에 보내주신 민원서류를 검토한 바 동 사안은 “도서관 정책 질의”내용으로 “문화체육부”에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 기관으로 이첩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회신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